

피서지 내 불법촬영 단속 강화한다

전북경찰청, 피서지·고속도로 휴게소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우려지역' 합동 점검

전북지방경찰청은 8월 1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및 해수욕장·계곡·물놀이시설 등 피서지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우려지역에 대하여 경찰·자치단체·도로공사측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일제 점검과 불법촬영 성범죄 강력 단속활동을 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활동에서 피서지 내 화장실·탈의실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수유실 내에

전문 탐지장비 등을 활용하여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밀 수색하고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한다.

특히, 공중장소 카메라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 해소와 근절을 위해 주민·협력단체·지자체·경찰 모두가 동참해야 하고 '불법촬영 성범죄는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움으로 사건에

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 및 초소형·위장형 카메라의 구입이 수쉬위지면서 불법 촬영 성범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카메라 불법촬영 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사전예방과 더불어 초기단계부터 강력히 대응하고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수사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법촬영은 범죄 행위라는 인식과 예방을 위

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해수욕장의 공공 샤워실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물레 카메라 피해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수상한 구멍이 있는지 잘 살피고 소형 카메라도 많이니까 반지나, 나사못, 시계를 자꾸 만지는 사람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송호철 기자



무더위 날려줄 전주한옥마을 쿨링포그 폭염이 지속되는 지난 31일 전주 한옥마을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더위를 날려줄 쿨링 포그(Cooling Fog)가 설치된 가운데 한옥마을 향교길을 지나는 시민들이 시원한 물바람을 맞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 쿨링 포그(Cooling Fog)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동되며 30분 가동 후 5분 휴식을 거치며 운행된다.

쌀 생산 돕는 '벼짚환원사업' 신청하세요

전주시,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서 신청·접수

전주시는 오는 8월말까지 한달간 2018년도 벼짚환원(지력증진)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벼짚환원사업은 화학 비료 사용 등

으로 지력이 떨어진 농지에 벼짚을 잘게 잘라 가을갈이를 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올해 전북 도내 농지에 벼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이 사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기한 내 벼짚환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규모는 농가당 0.1~3ha로, 지원단가는 1ha당 최대 20만원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벼짚환원 사업을 신청한 1,204농가에 총 1억

6,61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8월에 벼짚환원사업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 11월 한 달 동안 농지소재지 동 관계 공무원의 사업완료 현지 확인이 있을 예정으로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가을갈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호철 기자

전북경찰 '현장솔루션팀' 교통안전시설 현장점검 완료

교통불편 민원다발·교통사고다발 지점 도로 구조적 개선필요 점검하여 개선추진

전북지방경찰청이 도내 교통불편 민원다발 및 교통사고다발 지점에 대하여 현장점검과 도로의 구조적 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 6월 4일 전북지방경찰청 실무자 4명, 교통안전시설 5년 이상 현장업무 담당자 7명 및 교통공학 분야 특별재용자 5명 등 16명으로 현장솔루션팀을 구성, 6월 하순부터 7월하순까지 4주 동안 도내 15개 교

통안전시설을 점검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반복적인 교통 불편 민원지점과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지점 및 시민 교통 불편 구간임에도 해결책 부재로 대안이 필요했던 지점과 각 경찰서에서 점검을 요청한 16개소를 포함한 총 32개소(교차로 9개소, 차로 재배분 5개소, 회전규제 5개소, 신호운영 3개소, 일방통행 1개소, 중앙선 절선 1개소)를 개선 대상으로 정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덕진구 은고을로 진흥공단교차로 덕진경찰서에서 정여립로 만성지구 방면 좌회전 차선은 지난해 1월 3차로에서 4차로로 1차선이 증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하여 출퇴근시간 상습교통정체가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호값 조정과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80→130m)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해소되지 않아 이번 현장솔루션팀 현장점검을 통해 우선 개선대상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전 차로의 차로 폭 조정 및 보도를 재정비하여 좌회전 대기차로를 1→2개차로 추가 신설하는 등 올해 시설개선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은 "향후 위 나머지 개선대상 지점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도로관리청과 협업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시설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송호철 기자

'또 응급실 폭행' 간호사 폭행한 10대 여성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전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10대 여성이 자신을 치료해 주려고 한 간호사 2명을 폭행해 입건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1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4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병원 응급실 병원에서 간호사 B(29·여)씨와 C(25·여)씨를 손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119구조대

에 의해 해당 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링거를 스스로 제거한 뒤 사라졌고,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B씨와 C씨는 A씨를 병상으로 옮기려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두 간호사는 현재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 우선 귀가 시켰다. 조만간 소환해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뉴스스

대형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사고 막는다

전주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유도·지원대상 확대

여름 휴가철과 가을 행락철 이전 장착 유도할 계획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 과태료 100만원 부과 예정

전주시가 전세버스와 화물·특수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해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과 가을 행락철 이전에 장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나가는 방침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특수여객)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경고장치를 장착하는 대형차량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1대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후, 보조금 청구서를 전주시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착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장착비용의 80%를, 50만원 초과시에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또한, 첨단안전장치로 성능·물리규격이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인증제품이 지난 4월말 7개에서 현재 11개 제품으로 늘었고, 전방충돌 경고기능이 포함된 보조금 지원대상 제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와 전화(1577-0990)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사업용 차량운전자들의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재 화물협회와 전세버스조합, 운송사업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병호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여름휴가와 가을 행락철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청율이 저조한 법인 운송사업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장착으로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시는 오는 10월 공포·시행 예정인 교통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별도 규정됐던 의무 장착 예외대상차량들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지원 대상차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호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